

문화수도 조성 종합계획과 향후 과제



8일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종합계획 대국민보고회에 참석한 노무현 대통령 내외가 박수를 치고 있다. /사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문화전당, 2문화 에너지 세계에 공급

광주를 아시아의 문화중심으로 만드는 건국 이래 최대 문화프로젝트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종합계획이 발표됐다. 8일 발표된 종합계획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법정계획이자 '세계를 향한 아시아 문화의 창-문화로 아시아와 함께 세계로'라는 비전을 담고 있다. 종합계획에 포함된 문화중심도시 비전 달성을 위한 4대 역점 과제(아시아문화전당 건립·운영,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예술진흥 및 문화관광산업육성, 문화교류도시의 역량 강화)와 향후 과제 등을 살펴본다.

■ 국립아시아문화 전당 주요 시설

Table with 2 columns: Facility Name, Description. Includes items like '민주평화교류원', '아시아문화교류지원센터', '아시아문화정보원', etc.

■ 7대 문화권역별 세부 조성 방안

Table with 3 columns: Cultural Area, Target, Program. Includes areas like '문화전당', '아시아문화교류원', '아시아문화정보원', etc.

내년 3월 기공식... 공연장 건립 등 검증후 추진 20년 투입될 사업비 5조3천억 조달 최대 관건

◇아시아문화전당 건립·운영=문화전당은 조성사업의 핵심 거점시설이자 최우선 과제다. 문화전당은 민주평화교류원, 문화창조원, 어린이지식문화원, 아시아예술극장, 아시아문화정보원 등을 통해서 아시아 문화의 창조적 에너지를 광주, 전국, 아시아, 세계로 공급할 예정이다. 문화전당 시설 중 핵심시설인 '민주평화교류원'에는 5·18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민주·평화의 정신을 계승하는 '민주·인권·평화 기념관'이 들어서며, '아시아문화(정보)원'은 아시아 각국의 문화 자료를 수집, 연구 및 보존해 아시아 문화 재창조 활동의 원천자료를 제공한다. 광주시 동구 광산동 옛 전남도청 일원 11만8천여㎡의 부지에서 터득기 공사가 진행 중인 문화전당은 오는 2012년 5·18 32주년을 기념해 공식 개관한다.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명실상부한 문화도시로서의 광주 리모델링을 위해 7

대 문화권을 중심으로 문화도시의 기반이 조성된다. 광주 전역에 걸쳐 조성될 7대 문화권은 ▲문화전당권-동구 문화전당 주변 ▲아시아문화교류원-남구 사직공원·양림동 일대 ▲시각미디어문화권-북구 중외공원 일대 ▲문화경관·생태환경보존권-북구 무등산 및 광산구 영상강·황룡강 일대 ▲아시아전승문화권-남구 대촌·칠석·효천역세권 ▲아시아신과학관-광산구 비아동 ▲교육문화권-서구 마북동 공군대학교 부지 등으로 조성된다. ◇예술진흥 및 문화관광 산업 육성=광주의 예술진흥과 문화산업 5대 콘텐츠(음악, 공예·디자인, 게임, 첨단영상, 예술테이먼트) 집중 육성, 관광의 활성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예술 진흥은 창작기반 활성화와 더불어 임박한 국악제와 같은 전통예술에서부터 광주비엔날레에 이르는 현대예술까지 광주 지역의 예술 역량을 강화해 문화자원을 확대하는 것이다. ◇향후 과제=정부의 종합계획이 발

표됨에 따라 오는 11월 말까지 광주시는 연차별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3월까지 문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문광부는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중간평가 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5년 단위로 계획을 수정·보완하도록 특별법에 명시했다. 문광부는 내년 3월 전당 건축물 기공식을 갖고 논란이 됐던 문화전당 랜드마크 기능 보완, 대형공연장 건립 등의 쟁점들에 대해서는 내년에 타당성 검증 등을 거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2023년까지 20년 동안 추진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 투입될 총 5조3천억원의 재원 조달 문제는 남아야 할 산으로 남았다. 국비 2조8천억원, 각국의 문화도시, 국제예술단체 및 전문가, 해외 한민족 등을 포함하는 전방위 협력망을 구축할 예정이다. ◇향후 과제=정부의 종합계획이 발

표됨에 따라 오는 11월 말까지 광주시는 연차별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3월까지 문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문광부는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중간평가 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5년 단위로 계획을 수정·보완하도록 특별법에 명시했다. 문광부는 내년 3월 전당 건축물 기공식을 갖고 논란이 됐던 문화전당 랜드마크 기능 보완, 대형공연장 건립 등의 쟁점들에 대해서는 내년에 타당성 검증 등을 거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2023년까지 20년 동안 추진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 투입될 총 5조3천억원의 재원 조달 문제는 남아야 할 산으로 남았다. 국비 2조8천억원, 각국의 문화도시, 국제예술단체 및 전문가, 해외 한민족 등을 포함하는 전방위 협력망을 구축할 예정이다. ◇향후 과제=정부의 종합계획이 발

“북핵 빠른 속도로 완전해결 확신 깨끗한 대선 되도록 최선 다할 것”

노대통령 시정연설 뒀 담았다

노무현 대통령은 8일 한덕수 총리가 대독한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2007 남북정상선언'의 의미와 성과, 참여정부 5년간의 국정운영 평가, 향후 국정운영 방향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특히 노 대통령은 이번 국회 시정연설이 임기 내 마지막이라는 점을 염두에 둔 듯 참여정부 출범 후 5년간 일궈낸 국정운영 성과에 대한 평가에 상당한 분량을 할애하면서 국회를 계류중인 민생, 개혁법안들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남북정상선언 의미·성과 강조=노 대통령은 연설에서 남북정상회담의 성과인 '2007 정상선언'의 구체적인 내용과 의미를 첫머리로 올려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이번 정상선언의 의미를 6·15 공동선언 이후 7년간의 성과를 토대로 군사적 신뢰구축과 평화의 제도화하는 틀을 마련하고 한 차원 높은 남북관계의 미래 비전을 포괄적이면서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 대통령이 "6자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진전된 합의가 도출된 데 이어 남북정상회담이 이를 재확인함으로써 북핵 문제도 빠른 속도로 완전한 해결에 이를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힌 점은 눈에 띄는 대목이다. '이번 정상회담 의제에서 북핵문제가 제외됐다'는 정지권 일부와 보수세력의 비판

을 의식한 해명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또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 개발과 관련,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유지하면서 발상의 전환을 통해 군사안보 벨트에서 평화변영 벨트로 전환하기 위해 남북간 합의를 도출했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공명선거 실현 강조-"임기 끝까지 국정 책임"=노 대통령은 대선과 관련, "이번 선거가 헌정 사상 가장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공명선거의 지지를 천명했다.

하지만 노 대통령은 "정치권도 과거의 잘못된 선거관행을 청산하고 공명선거 풍토가 확실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정치권의 경선과정에서 나타난 선거 과열과 부작용에 대한 '충고'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언급이다.

노 대통령은 또 시정연설에서 참여정부 출범 이후 5년간 즐기게 추진해왔던 개혁과 정책 등을 통해 일궈낸 국정운영의 성과에 대해 연설문의 상당 부분을 할애하면서 자평했다.

그러면서 노 대통령은 "참여정부는 다음 정부에 부담을 주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렇다고 할 일을 덮어두는 일도 없을 것이며 임기를 마치는 그 날까지 참여정부가 해야 할 일을 책임있게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임기 말까지 국정수행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 /연합뉴스

장관이 영남 출신이라 그런가 재촉했는데... 당시 이창동장관 "완벽한 계획 만들려고..."

盧대통령 문화수도 늦어진 이유 설명

노무현 대통령은 8일 오후 광주 김대중센터에서 열린 문화중심도시 대국민보고회에서 종합계획 수립이 1년 가량 늦어지고 사업규모가 당초보다 커진 이유를 특유의 직설적 어법으로 설명해 주목을 끌었다.

노 대통령은 문화도시 종합계획 수립이 지연됐고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문광부와 광주지역간 갈등이 빚어진 데 대해 잘 알고 있는 듯 정부의 입장을 상세히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지난 2003년에 당시 이창동 문광부장관이 종합계획안을 내놓지 않아 자꾸 다그쳐 물었는데 연말이 돼도 계획이 나오지 않았다"며 말문을 꺼냈다.

노 대통령은 "혹여 장관이 영남출신이라 그런 것 아닌가 싶어 재촉했는데 나중에 (이 장관을 불러) 이유를 알아보니 (이 장관이) '집만 덩그러니 지어놓으면, 자칫 건물만 폐허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며 당시를 회화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이창동 장관이 성질이 고약한 사람이예요. 완벽한 것을 좋아하죠. 영화 '밀양'을 만들 때도 일이 잘 풀리지 않아 집에서 벽에 머리를 찌고 있다는 말을 부인을 통해 들었더니"며 터진 사업 진행은 완벽한 계획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 "이 때문에 빠른 사업진행을 원하는 광주 지역과 문광부와의 갈등도 꽤 컸다"면서 "1년 가량 사업이 늦게 추진됐지만 2005년 연말에 좋은 기분으로 옛 전남도청 앞에서 좌공식을 가졌다"고 말을 이었다.

노 대통령은 "정부가 왜 특정 도시에 공공인프라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느냐는 주장들도 많았다. 하지만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문화전당 하나가 아닌 도시 전체를 문화도시로 바꾸는 게 공약에 맞다고 판단했다"며 문화중심도시 사업 규모가 커진 배경을 설명했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Large advertisement for 'Seogi Bocheonggi' (World Heritage) featuring a rabbit mascot and text about the project. Includes contact info: 1588-8499, 080-222-0100.